



즉시 배포용: 2018 년 4 월 1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석방 중인 뉴욕 주민의 투표권을 복원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

*수감 상태에서 석방된 주민의 투표권 복원*

*시민 참여를 늘리고, 재범을 줄이며, 공공 안전을 촉진하는 조치*

*유색 인종 뉴욕 주민의 참정권 박탈 감소 -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계 뉴욕 주민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석방 투표권 제한*

*형사 책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주지사의 형사 사법 기록 구축, 법 집행 및 공공 보안 시스템과의 치명적인 조우에서 비무장 민간인 사망시 특별 검사 임명*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행정명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석방 중인 개인의 투표권을 복원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개혁안으로 석방된 주민의 투표권을 복원시켜서 뉴욕 주민 수천명의 박탈된 참정권을 원상복구할 것입니다. 가석방 투표 제한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계 뉴욕 주민이 인구의 7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유색 인종 뉴욕 주민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 참여는 재범률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공공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석방된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채무를 갚고 복귀한 뉴욕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 개혁안은 참정권 박탈 사례를 줄이고,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공평성과 공정성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표권을 보류하거나 지연할 경우, 우리의 민주주의가 약화됩니다."

이 집행 조치는 석방된 후 지역사회 감독 하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주민에 대한 뉴욕의 현재 참정권 박탈을 원상복구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수감 상태에서 석방된 후

투표권을 복원시키는 14 곳의 다른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 동참합니다. 현재 가석방 중인 약 35,000 명의 뉴욕 주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주민들은 가석방 조건에 의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일하고, 세금을 내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투표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선택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석방 중에 있는 주민의 투표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뉴욕의 방식과 내부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집행 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투표권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은 가석방과 집행 유예 상태의 보호 관찰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종종 불법적으로 참정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2006 년 브레넌 센터 연구(Brennan Center study)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뉴욕 카운티 중 삼분의 일이 부정확하게 집행 유예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모든 카운티의 또 다른 삼분의 일이 불법적으로 유권자 자격 상태를 증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uomo 주지사의 형사 사법 제도 개혁 성과 구축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지난해에만 뉴욕은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을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으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 심문 시 동영상 기록을 보관하도록 법 집행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을 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사진 배열의 이용을 허용했으며, 그러한 극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변호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도록 뉴욕주 전체에 대한 획기적인 Hurrell-Harring 합의를 통해 궁색한 형사 변호 시스템의 개혁을 확대하는 등의 전면적인 형사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2015 년 7 월 8 일에 행정명령 147 호에 서명했으며, 여기에서는 뉴욕 주 법무장관을 법 집행 공무원과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특별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민간인이 그 사망 시점에 무장한 위험 인물이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 검사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이런 종류로는 미국에서 최초의 유일한 행정명령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뉴욕주는 뉴욕주 역사상 한 명의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주지사가 폐쇄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인 24 곳의 교도소와 소년원을 폐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6,000 명이 넘는 재소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20,000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경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성공을 위한 일자리(Work for Success)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아울러, Cuomo 주지사는 전 수감자들이 사회 복귀 시 직면하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2014 년 뉴욕주 최초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를 창설했습니다. 출범 이후 위원회는 주정부 기관에 “공정한 채용

기회(Fair Chance Hiring)”원칙을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유죄 판결만으로는 뉴욕주 주택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급하는 데 이르기까지 사회 복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지원했습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개인에 대해 법원은 비폭력 범죄 유죄 판결을 최대 2건까지 봉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지사는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출신 카운티로 복귀하는 수감자 총 5,000명을 지원하는 20곳의 카운티 복귀 태스크포스(County Re-Entry Task Forces)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 행위 근절에 공헌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활용하며 사회적 기술을 더 개발하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조정 치료, 직업 훈련, 취업알선 및 기술개발, 인지행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